

## 동북아의 지역 갈등과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

장 원 순  
공주교육대학교

### I. 서론

현재 세계의 패권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그리고 다시 아시아, 그중에서도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동북아의 3국인 중국, 일본, 한국의 GDP는 이제 미국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세계의 블록화 경향에 따라 만약 동북아에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동북아 공동체는 아마도 세계를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갈등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동북아 3국간에는 역사문제, 영토문제, 정치·군사문제 등이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지난 시기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그리고 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에는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간에는 독도(다케시마)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일본간에는 북방 4개 섬과 관련하여 영토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비 증가, 북한의 핵개발, 마일 안보체제강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체제 강화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 원인은 대단히 복잡적이고 다중적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방면에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교육, 특히 지구촌의 상호이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지구촌 시민교육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 갈등의 모습과 특징(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구촌 시민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갈등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평화와 공존에 대한 칸토와 하버마스의 논의를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현실과 이론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구촌 시민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위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 II. 동북아의 의미와 부상, 그리고 지역 갈등

본 장에서는 동북아의 의미와 최근 동북아의 경제적 부상 그리고 동북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북아의 개념과 경제적 부상

#### 1) 동북아의 개념

동북아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동북아에 대한 가장 좁은 개념은 한국, 중국, 일본 3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3국간 논의되는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보다는 넓은 개념은 UN이 내리고 있는 동북아 개념이다. U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위 지역으로 North east Asia를 구분하고 여기에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6개국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와다 하루키, 2009: 81).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은 대부분의 일본 및 중국의 학자들과 국내 일부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홍콩 포함) 및 대만,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 몽골을 아우르는 지역을 동북아로 보고 있다(김강녕, 2012: 51).

동북아에 대한 가장 넓은 개념은 소위 지정학적 개념이다. 이는 지역에 연관된 세력 관계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른 경우, 미국이 동북아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문서에 규정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크게 확대된 동북아 개념에는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일본과 더불어 대만, 러시아, 몽골, 미국이 포함된다(김강녕, 2012: 52, 와다 하루키, 2013: 83).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여러 개념들 중 지정학적 개념을 채택하여 동북아 개념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대만포함), 일본, 미국, 몽골, 러시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지정학적 개념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 지역의 실질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이고, 이들과의 관계를 벗어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장에서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할 때는 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이고 이들 국가들이 동북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동북아의 경제적 부상

최근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급격히 부상하는 지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GDP는 1조 3045억 달러, 중국GDP는 9조 2402억 달러, 일본GDP 4조 9015억 달러로 동북아 3국의 GDP를 합하면 14조 4462억 달러로, 미국 GDP 16조 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세계은행 홈페이지 참고).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제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중·일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 1990년 3조6788억 달러로 미국 5조7508억 달러, 유럽연합 5조6881억 달러보다 2조 달러 이상 적었다. 그러나 한·중·일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12.9%를 기록하면서 유럽연합을 따라 잡았다. 같은 기간 미국은 9.8%, 유럽은 7.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 나라

의 국내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6.8%에서 19.6%로 커졌다(한겨레, 2012년 6월 7일자).

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에 속한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3월 16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률은 5.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다소 약화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필리핀은 유럽과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상승이라는 상황에서도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이주경제, 2012년 3월 16일자, 조선비즈, 2012년 6월 5일자).

앞에서 언급한 동북아 3국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결될 경우, 즉 동아시아 지역은 인구, 경제규모, 교역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즉 동아시아는 19억 명의 인구와 6조5,000억 달러의 내수시장, 2조 6,000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갖게 되며,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 있어서 상호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를 앞지르는 중요한 지역공동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기, 2007: 191).

## 2. 동북아 지역 갈등의 종류와 특징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지역이지만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정치·군사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동북아 지역 갈등의 종류

#### 1) 정치군사문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동북아에는 정치이념적인 대립과 군사적인 대립이 함께 존재한다. 먼저, 동북아에는 여전히 냉전구도가 강하게 남아 있다. 중국과 몽골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현재 동북아에는 2개의 분단국가가 현존한다. 그것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다.

둘째, 동북아에는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군사비의 호름이다. 단적으로 사례로 세계의 전체 군사비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동북아 지역의 군사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군사비의 60%에 이른다(문화일보, 2014, 3월5일자).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에 따르면 2013년 세계국방예산순위 1위는 미국으로 6004억 달러이며, 2위는 중국으로 1122억 달러이며, 3위는 러시아로 682억 달러이며, 일본이 510억 달러로 7위, 한국이 318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다(중앙일보, 2014년 2월 7일). 세계군사비지출 순위 11위인 한국까지 포함하면 세계군사비지출 순위 11개국 중 5개국이 동북아 존재하는 셈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해군병력 60%를 집중시키기로 하였으며, 중국 역시 2014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2.2% 늘리겠다는 방침을 2014년 3월 5일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핵의 위협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재무장을 자극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을 군국주의자라고 비판하는 한국 등

주변국의 시각을 비교면서 “이웃에 군사지출이 적어도 일본의 2배에 달하는 국가가 있다.”고 중국을 겨냥해 발언한 바 있다(문화일보, 2014년 3월 5일). 이들 군사적 대립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하여 미국, 한국, 일본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2) 역사 문제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해소되지 않은 역사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역사문제는 중국과 한국, 대만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문제이다. 와다 하루키 교수에 따르면 청일전쟁부터 1945년까지 50년간의 일본사는 전쟁의 50년이었다고 말한다. 이 시기 동안 동북아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많은 생명들을 잃었으며, 각종 핍박과 억압을 받았다. 동북아는 그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지역이며 그 원한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지역이다(와다 하루키, 2009: 137-138).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문제는 최근 위안부 문제, 인간생체실험 했던 731부대 문제, 난징 대학살 문제,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간에는 고구려의 역사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변방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이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옛 영토가 현재 중국과 한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3) 영토 문제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영토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중국과 일본간에는 센카쿠열도(다위오다오)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은 점차 격화되어 중일간의 경제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최근 군사분쟁의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의 섬을 사들이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2012년 9월 일본정부가 민간인 소유자에게 문제의 섬을 사들이겠다고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오위다오와 부속도서(센카쿠열도)를 중국영토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영해기선을 전격 선포했다. 또 영해기선을 근거로 해양감시선 2척을 급파하는 등 사실상의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유현석, 2013: 224).

그리고 한국과 일본간에는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를 ‘본국소속’이라 한 것을 근거로 2월 22일 시마네 현이 이를 고시한 것을 들어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와다 하루키, 2009: 102). 이에 대해 한국은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황제가 이 섬을 석도라고 명명하고 울릉군의 관할 아래 두는 칙령을 반포한 자료를 근거로 독도(다케시마)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김학준, 2010: 31).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총사령관 지령 SCAPIN 677호에 따라 이 섬은 울릉도, 제주도 등과 함께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전쟁 전전 후인 1954년 2월 10일,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이후에 이 섬에 무인등대의 무전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1997년 이곳에 5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만들고, 1999년 3월부터는 유인등대를 가동시키고 있다(와다 하루키, 2009: 102).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

표기 문제를 두고 또한 갈등하고 있다. 일본은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한국은 이를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북방4개 섬을 둘러싸고 갈등이 또한 전개되고 있다.

#### 나. 동북아 관계의 특징

다양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역사성을 지닌 국가 민족주의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김강녕, 2012: 60, 정태욱, 2007: 175, 민성우, 2013: 70-73, 하라다 도모히토, 2012: 167-168). 동북아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열강의 침범을 받아 영토분할 또는 식민지 경험을 가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동북아에 강한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다. 이 국가 민족주의는 원래 유럽에서 유래했지만 그곳에서는 현재 쇠퇴한 반면, 동북아에서는 힘차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sup>1)</sup>. 특히 중국은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 주권론, 영토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것이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많이 가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과거굴욕에 대한 자존심 회복과 국민동원 및 통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강녕, 2012: 60).

둘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에는 세력 균형이 존재한다. 유럽에서는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작동되고 있지만 동북아의 4강인 미중일러 간에는 세력균형이 작동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하여 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동북아의 4강은 주로 양자관계를 통하여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조하고 있고, 유럽의 협조까지 동원하고 있는 데서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갱신하고 신방위협력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미국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김강녕, 2006: 60-61, 이남주, 2008: 16-20).

셋째, 경제발전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자유주의보다 중상주의를 선호하여 추구해오고 있다.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외환위기를 체험한 뒤 종전에 국가가 주도했던 발전국가를 지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시장기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지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여전히 구조조정과 복지, 방위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중상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는 국가가 시장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동북아에서는 시장이 유럽에 비하여 미비되어 있으므로 기간 산업, 환경, 실업,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김강녕, 2012: 61-62, 민성우, 64-66).

넷째,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는 권위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의 근대화에서 있어서 국가는 시민사회에 선행해왔고, 최근에 와서야 시민사회가 다소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시민사회를 주도해 온 결과 동북아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까지 자민당이 통치한 지배당 민주주의(dominant party democracy)를 실행해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그 후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실험이 지속되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흡하다. 이 지경도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현대 의회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종전의 경식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아직도 범치주의적 자유화와

시민정치문화를 제도화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는 대체로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김강녕, 2012: 62).

### Ⅲ.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이론적 논의: 칸트와 하버마스

본 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이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어떻게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칸트와 하버마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칸트의 공화국들의 연합제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칸트는 이 세 개의 확정 조항이 승인되고 준수된다면 국가간에 영원한 평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칸트, 1992: 24-40).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첫째, 칸트는 국가간의 평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정체가 공화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공화정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간으로서)한 사회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둘째, (신민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동된 입법에 의존하는 의존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셋째, (국민으로서)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칸트, 1992: 26). 즉 공화국 내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이들은 오로지 하나의 공동된 입법에만 의해, 즉 일반의지가 반영된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칸트가 제시한 공화정체는 통치 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즉 그것은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화정체는 헌법에 근거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치 형태이다. 물론 이때 헌법은 군중이 하나의 국민으로 되는 일반적 의지의 표출이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법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통치방식은 대의의제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만일 대의제를 취하지 못한다면 통치방식은 그 자체

2) 칸트가 이를 공화정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의 공동된 입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의미를 보다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치가 자의적 통치가 아닌 모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가 말한 공화정은 다음의 세 가지 원리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 법의 지배, 삼권분립, 대의제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런 공화정체를 채택할 때 영원한 평화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한구, 1992: 100).

1) 중국사회과학원 민성우 박사는 동북아에서 국가민족주의가 강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동아시아에서 베스트팔렌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민성우, 2013: 53-56).

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전체적이 되거나 아니면 독단적이 된다(칸트, 1992: 30). 그리고 공화정체는 일법부로부터 집행권(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치 형태이다(칸트, 1992: 27-28).

이러한 공화정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칸트에 따르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다(이 체제 아래서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때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감행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무척 신중해지게 된다. 즉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경우에 국민들은 싸움터에 나아가 하고, 자신들의 재산에서 전쟁비용을 염출해야 하며, 그리고 전쟁이 남긴 참화를 고생스럽게 보충해야 하며, 평화자체까지도 입맛을 쓰게 하는 결코 상환될 수 없는 막대한 국가적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칸트, 1992: 26-27). 따라서 국민은 이러한 폐해가 있는 전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대의제 하에서 이는 곧 국가의 의사가 된다.

둘째,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맹을 맺어야 하며, 국제법은 이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자연 상태에 있을 경우, 즉 외적인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칸트, 1992: 30-31).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포함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성적인 길은 다음의 길밖에 없다. 즉 그들 국가는 개인의 경우처럼 야만적인 무법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 스스로를 공법의 규제로 내맡기는 한편, 궁극적으로 전 세계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칸트, 1992: 35).

그러나 국제법의 이념에 의해서는 이들 국가는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sup>3)</sup>. 따라서 이론적으로 옳은 것이 실천적으로는 거부된다. 그러므로 만일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세계 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소극적 대안으로서 국가간 연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칸트, 1992: 35).

칸트에 따르면 이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그리고 자연상태의 인간처럼 그 연맹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시민권에 복종시키거나 강제적으로 구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이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가능성(개관적 실재성)은 분명해 진다(칸트, 1992: 34).

그렇다면 칸트는 현재와 같은 국제연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칸트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체, 즉 공화국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독재국가들도 가입이 허용되는 국제연맹과는 다른 것이다. 즉 평화는 궁극적으로 국제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화들간의 연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이한구, 1992: 101).

셋째, 이방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며 이는 세계시민법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체로 변화되고 이들 공화국들이 연맹을 결성했다고 해서 과연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까? 여기서 조항(3)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말하지만 영원한 평화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국제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국제법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결합시키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그것이 바로 세계시민법이다

(칸트, 1992: 40).

칸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함에 의해 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 손님으로서 환대받을 권리를 갖는다. 본래는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세세토록 점점이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방인을 적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 즉 이방인을 우호, 즉 손님으로 대우해야 하며 이방인은 낮은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해안 거주민이 근해에서 배를 약탈하거나 난파한 선원을 노예로 삼는 잔악한 행위는 자연법에 위배되며,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들의 침략 행위 역시 가증스러운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우호의 방식에 의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런 평화로운 관계는 공법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인류는 세계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칸트, 1992: 37-38).

## 2. 칸트의 헌법: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민장의 역곡

칸트가 꿈꾸었던 영원한 평화를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인권」이라는 논문에서 칸트가 생각한 영구평화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칸트는 이성에 자연적으로 호응하는 세 가지 경향들을 언급했다. 그것은 (1)공화정의 평화적 본성, (2)국제교역의 공동체 형성, (3)정치적 공론의 장이다(하버마스, 1996: 130).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평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 위 3가지 경향은 다른 요인에 의해 한계를 갖게 된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칸트는 국가내부에서 공화제적 통치양식이 관철되는 정도만큼 국제관계는 호전성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민주적 입헌국가의 시민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평화정책을 준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정은 1795년 당시 칸트가 그 양면성 때문에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민족주의라는 이념의 동원력에 의해 부정된다. 민족주의는 신민들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변형시키는데 분명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족국가를 그 전신인 판로적 왕조국가보다 더 평화롭게 만들지는 않았다. 칸트는 민족주의 정신에 불타는 병역의무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별을 잃은 파괴적인 자유전쟁의 시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하버마스, 1996: 130-131).

(2)칸트는 정보, 인간, 상품의 교류를 통해 점점 더 증대되는 국가간 상호의존관계를 보면서, 특히 무역의 확대에서, 국가간 평화적 결합을 북돋우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근대 초기에 확장된 무역관계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 칸트는 이 세계시장이 ‘호혜적 자기이익’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 무역정신이 전쟁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하버마스, 1996: 131-132).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계급대립을 야기하고 이 대립은 자유사회의 평화와 평화정신을 이중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을, 헤겔은 영구경제학자들을 읽음으로써 배웠지만, 칸트는 알지 못했다.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과정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긴장이 국내정치에 계급투쟁이라는 짐을 지우고, 국외정치를 호전적 제국주의의 방향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칸트는 예견하지 못하였다.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의 전반

3) 칸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는 외적인 제한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에 유럽의 정부들은 사회적 갈등을 외부로 돌리고, 외교적 성공을 통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힘을 이용하였다(하버마스, 1996: 131-132).

세계화 과정은 기술적으로 민감한 내부구조를 가진 복잡한 사회를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즉 세계화는 고전적 국제법의 본질적 전제조건—즉 국가주권, 국내정치와 국외정치 사이의 명확한 분리—이 성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민간은행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은 국민국가가 행사하는 주권을 무력화하였다.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부조차도 오늘날 개별국가로 경제 지위권 활동공간과 전 세계적 그물망으로 조직된 생산관계의 기능적 조건들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경제가 탈국가화 됨으로써, 정치는 일반적 생산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성취한 사회적 수준을 유지할 지렛대도 잃게 되었으며, 동시에 주권국가를 구성하는 국내정치와 국외정치 사이의 경계가 불투명해졌다. 그 결과, 칸트가 생각한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가졌던 독립성의 토대(물리적 강권력)는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하버마스, 1996: 132-133).

(3)칸트에 따르면 공화정에서는 정치문제가 등장하면 이를 자유롭고 평등한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장, 즉 공론장에서 무엇이 헌법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검토 결과 헌법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결정되고 이는 헌법에 포함된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칸트가 생각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 전제된 것은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장, 즉 공론장이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칸트는 철학의 설득력과 철학자들의 진실성을 과도하게 신뢰하였다고 비판한다(하버마스, 1996: 134). 즉 칸트는 물론 교양이 있고 논증할 수 있으며 조망할 수 있는 공론장의 투명성을 기대하였다. 이 공론장은 비교적 소수의 교양 있는 시민공중(public)에 의해 유지된다. 그런데 칸트는 이 부르주아 공론장이 전자 대중매체에 의해 지배받고, 의미론적으로 변질되며, 상징과 시각적 현실들로 가득 찬 공론의 장으로 구조 변동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 ‘말하는’ 계몽의 분위기가 언어 없는 세뇌로 변하거나 언어를 기반으로 탈바꿈하리라고 칸트는 예감조차 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하버마스, 1996: 134).

#### IV.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와 실천 방안

본 장에서는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을 형성해 나아가기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들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1]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과정

문제점	과정	지향점
1)현실적 문제: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 권위주의 2)이론적 문제: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론장의 왜곡	1)민족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중상주의 해체 2)공화국 형성 3)공화국의 연합체 형성 4)우호적인 문화형성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들의 연합체

그렇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지구촌 시민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이는 크게 현실적인 문제와 이론적인 문제로 구분된다. 첫째, 동북아 관계의 특성에 들어난 바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 권위주의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나타난 이론적인 문제로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론장의 왜곡 문제가 있다.

동북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아갈 방향으로는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들의 연합체’이다. 이는 현재의 국제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현재의 국제연합이 독재 및 권위주의 국가들도 그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여 이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시민들의 일반의지가 반영된 법에 의해 지배되는 그리고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공화국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이 연합체는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합체는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처럼) 그 연합체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을 시민법에 복종시키거나 강제로 구속시킬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칸트, 1992: 34).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북아 국가들로 하여금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의 연합체’로 가도록 하기 위해 지구촌 시민교육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각 국에 존재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 권위주의를 해체해야 한다. 둘째, 공론장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공화국을 형성하며 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공화국들 간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넷째, 세계 각국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시민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베스트팔렌체제를 넘어서 국가들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갔던 유럽의 노력과 다소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탄싱우, 2013, 이남주, 2008). 즉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베스트팔렌 체제의 특성을 넘어서 동북아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의 지구촌 시민교육의 핵심,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권과 민주주의는 앞에서 말한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 자본주의, 권위주의, 공론장의 왜곡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이 국가, 민족, 경제발전, 권위주의로 귀속되는 것, 종속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하여 공론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앞에서 말한 국가가 오히려 인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권은 사람들이 자

본주의에 희생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시민교육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구촌 시민교육(human rights & Democracy bas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부르고자 한다(Starkey, 2010, 39참고, Oberleitner, 2007 참고).

## 2.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 실천 방안

그렇다면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들의 연합체를 형성해 나아가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 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의 해체를 위한 교육: 기존 역사와 영토, 시민교육의 재구성

먼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중상주의를 해체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기존의 역사교육과 영토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민족주의, 국가주의 시각을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는 역사교육을 해체하고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역사는 세 가지의 접점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랑시에르, 2011). 그것은 바로 문학, 과학, 정치이다. 이 중에서 정치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구성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술은 많은 부분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해석은 한 국가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자칫 국가들간의 평화와 공존은 어렵게 할 수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역사를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기반하여 해석하여 가르치기보다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해석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즉 역사를 인류의 자유, 평등, 연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저해하며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토교육에서는 가급적 자민족중심주의, 자국가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적인 사례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다 지명 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의 표기 문제를 두고 일본과 한국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바다를 동해라고 표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영토교육이 얼마나 자국가중심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단지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북한, 러시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는

4) John J. Cohen이 주관했던 시민교육정책연구(Citizenship Education Policy Study, 이하 CEPS)는 새천년의 시민의 자질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가치를 인식하고 관용할 수 있는 능력 2)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3)지역, 국가, 세계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 4)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 5)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6)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능력 6)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소비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의지 7)인권에 민감하고 이를 보호하는 능력(예를 들어 여성과 소수민족의 권리)(Avery, 2004: 41 재인용).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와 방안들은 이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것 또한 일본, 러시아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다는 전혀 동쪽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국만을 생각하는 지명 표기는 갈등을 낳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일본, 한국과 북한이 모여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 명칭을 정하든지, 어느 입장이 반영하지 않는 명칭을 정해야 한다. 전자의 방법으로는 러시아의 RU, 일본의 JA, 한국과 북한의 KO를 결합하여 임의로 결합하여 명칭을 방법이 있다. 즉 임의로 뽑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1위,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를 했다면, 바다 이름은 RUJAKO라고 명기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는 평화의 바다, 번영의 바다 등이 될 수 있다.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본래는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말한 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칸트, 1992: 37).

셋째, 시민교육이 근대시민혁명의 의미에 따라 개인에 기반하여 공적 영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국가, 민족, 경제발전과 같은 거대 주체를 위해 개인이 규정되고 동원되고 희생되는 형태의 시민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엄격한 의미의 시민교육이 아니라 개인 없는 공민(public person education without individual)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시민교육은 다소 공민교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장원순, 2009, Wang Minggang, 2004, Yoko Motani, 2007: 288). 이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공화국 형성을 위한 교육 :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

지구촌 시민교육에서는 각 국가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권위주의를 해체하려는 교육과 더불어 각 국가를 공화국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과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공화국의 특성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의 인권과 민주주의교육에서 무엇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중국, 한국,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한·중일 민주주의 지수(이코노미스트 2011)

	순위	평균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일본	21	8.08	9.17	8.21	6.11	7.50	9.41
한국	22	8.06	9.17	7.86	7.22	7.50	8.53
중국	141	3.14	0.00	5.00	3.89	4.38	2.94

위 표를 보면 일본과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중국은 현재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해 나아가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로운 선거와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5)</sup>. 한국과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7점대 점수는 결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몇몇 부분에서 7점대 점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 다소 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정치문화와 낮은 정치참여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기능과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문화에서 결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3권 분립체제의 미약,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문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의 쇠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정부기능에서 5점대 점수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인권과 관련하여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sup>6)</sup>는 일본과 한국의 인권 위험이 중간 정도이고, 중국은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권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적 특수성이 반영된 노동자나 여성의 경우, 민족주의나 단일민족의식이 반영된 재일한국인이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일본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는 부락민의 경우, 인권 발전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성, 2010: 229 참고).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 언론의 자유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한, 노동자의 권리 제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거의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인권이 전반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인권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 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동북아 체계 교육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구촌 시민교육방안으로 동북아 경제적 교류와 상호의존 관계, 다양한 문화 교류, 그리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동북아 인권체제 및 동북아 연합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다룰 수 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동북아 경제교류와 상호의존 관계를 다룰 수 있다.

한중일의 세 나라는 세계 GDP의 20.9%, 세계총인구의 23.6%, 세계 총무역의 15.2%, 세계 외환보유고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간의 경제교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0년 사이에 9.39%에서 21.13%로 증가했고 일본의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95%에서 21.02%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무역총액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9년 사이에 24.8%에서 17.44%로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역내교역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5) Wan Minggang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시민성교육이라는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과는 도덕과 삶, 도덕과 사회가 있으며 여기서는 애국심, 집단주의, 사회주의의 헌신, 중국의 우수한 혁명전통,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준법, 사회적 덕성, 사회적 책임, 타인애의 봉사, 포부와 덕성, 문화 그리고 규율을 갖춘 세대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Wan Minggang, 2004: 369). Wan Minggang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현재 중국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http://maplecroft.com/portfolio/new-analysis/2013/12/04/70-increase-countries-identified-extreme-risk-human-rights-2008-bhuman-rights-risk-atlas-2014b/>

그리고 인구 13억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자본보유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생동성과 인력자원의 역동성, 혁신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 국가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정현: 2006: 145, 이남주, 2012: 7).

한·중일의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자와 유교문화의 전래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한자의 형성과 전래 그리고 현재 공유하고 있는 모습과 유교문화의 형성과 전래로 한중일 모두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갖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불교의 전래, 감자, 고구마, 고추의 전래 등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다루고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재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장점은 발전시키고 그 단점은 수정해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의 권위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문화를 그대로 재생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 각 동북아 국가가 당면한 태풍, 황사와 미세먼지, 지진, 수해, 산사태, 원자력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룰 수 있다. 중국 민정부와 국가감재위원회가 2010년 1월 11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자연재해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 각종 재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1천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중국의 주요 자연재해는 연초 동북지역의 기온 급강하와 중남부 지역의 폭설, 윈난(雲南)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양쯔(揚子)강 중·하류의 여름 가뭄 등이었다(연합뉴스, 2012년 1월 12일). 일본은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쓰나미, 회오리바람, 원전사고 등의 문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봄이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황사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미세먼지, 가뭄, 물 부족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이 2013년 10월 21일 발표한 보고서 ‘동아시아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1970년대부터 입은 손실은 중국 2590억 달러, 일본 640억 달러 한국 150억 달러, 몽골 20억 달러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더욱 커져 동아시아 전역에서 GDP의 5%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위 보고서를 발표한 고든 휴즈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대응은 한중일 삼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에너지 경제, 2013년 10월 21일).

그 외 학생들과 동북아 인권체제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동북아는 급성장하는 지역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권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이다(Donnely, 1998). 학생들과 유럽인권체제, 북미인권체제, 아프리카 인권체제 등을 검토하여 동북아의 인권체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연합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연합과 같은 동북아연합을 만드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공동 번영하며 더불어 살아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라. 상호적인 우호 세계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동북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같은 듯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우호를 위해서 3국간 상호문화이해 및 체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현재 존재하는 동북아

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와 같은 문화를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즉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상호문화이해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국가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 이루어진 다양한 교류를, 각종 제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도움, 문화교류활동 등을 찾아 살펴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호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정신은 국가를 넘어서 지구를 공유한 같은 사람들의 우정이기 때문이다.

## V. 결론

동북아는 최근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동북아는 아마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의 공동체 형성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동북아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리더버그(Aron Friedberg)는 1993년에 발표한 글에서 아시아에는 민주주의, 경제 사회적 평등, 탈민족주의적 정치문화, 활력있는 지역기구 등 유럽이 냉전체제 이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요인들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대국들이 충돌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이남주, 2012: 9-10).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북아 지역 갈등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칸트와 하버마스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육적 방안, 즉 지구촌 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정치 군사적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이 존재하며, 동북아의 관계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중상주의,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평화에 관한 칸트와 하버마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국가간 평화를 위해서는 각국은 먼저 공화정체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공화국들은 하나의 연맹을 형성해야 하고, 셋째, 시민들 간에는 우호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버마스는 평화에 관한 칸트의 논의를 재검토하고 난 후, 칸트가 생각한 공화국들의 연맹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 이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민족주의, 자본주의, 공론장의 왜곡 문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와 공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지구촌 시민교육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상주의에 기반한 역사 및 영토, 시민교육을 해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역사 및 영토, 그리고 시민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에 굳건한 공화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권과 민주주의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아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과 다양한 문화 교류, 그리고 환경 및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동북아 국가 시민들 간에 우호정신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판적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문화일보(2014). “美 ‘리벨런싱’ 中 ‘軍현대화’ 경쟁…전세계 군비 60% 동북아 집중”. 3월 5일.

아주경제(2012). “올해 동남아 5개국 성장률 5.2% 전망”. 3월 16일.

에너지경제(2013). “한국, 기후변화대응 않으면 GDP최대 8% 손실”. 10월 21일.

연합뉴스(2012). “中 작년 자연재해로 1천126명 사망·실종”. 1월 21일.

조선비즈(2012). “아세안 추중해도 끄떡없는 필리핀, 올해 성장세 이어갈까”. 6월 5일.

중앙일보(2014). “군사비 팽팽 늘리는 중국 … 어느새 러시아의 2배”. 2월 7일.

한겨레(2012). “한·중·일 GDP, 세계1위 미국 제치는 건 시간문제”. 6월 7일.

김강녕.(2012).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특징.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한국평화연구학회** 제1권. pp. 39-74.

김학준.(2010). 한·일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9-36.

만상우.(2013). 베스트팔렌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 홍면기(외). (2013).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협력: 남북한, 중 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기획연구** 58. 동북아 역사재단. pp.51-73.

문정인(2006).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구축과 한국의 동북아 협력 구상**. 제주발전연구원, 동아시아재단(공편)(2006). 동북아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담론, 서울: 연세대출판부.

유현석.(2013). **국제정세의 이해: G2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와다 하루키(저). 이원덕(역)(2009).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신자유주의 선언**, 서울: 일조각.

와다 하루키(2013). **동북아시아 공동체론과 변경 그리고 과경민족의 역할**, 홍면기(외). (2013).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협력: 남북한, 중 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기획연구 58. 동북아 역사재단. pp.127-142.

위르겐 하버마스(1996).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인권. 하버마스(저)/한상진(편)(1996).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서울: 나남출판. pp.125-149.

이남주. (2012). 동북아 평화체제와 다자안보협력: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발전경로. **동북아 연구** 제27집 2권, pp.5-33.

이한구.(1992). “칸트와 영원한 평화”, Kant, Immanuel.(1796).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Königberg: Friedrich Nicolovius. 이한구(역). (1992).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울: 서광사.

이재기(2007). **FTA의 경제학**. 서울: 청목출판사.

자크 랑시에르(저), 안준범(역).(2011). **역사의 이름들**, 서울: 울력.

장원순(2009). 한국사회와 시민교육의 계보학: 형성과 역학 그리고 방향. **한국사회교육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사회교육학회. pp.13-29.

정진성.(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개선조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태욱.(2007). 동아시아에서의 지역 인권포럼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할. **아주법학** 제1권 제1호. pp.172-182.

하라다 도호히토(2012). 일본 시민교육의 계보와 사회과의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159-170.



- Avery, Paricia G.(2004).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Susan Adler.(2004). Critical Issues In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Connecticut: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pp.37-57.
- Donnelly, Jack.(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ordon Lauren, Paul.(2011).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sions See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ant, Immanuel.(1796).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Konigberg: Friedrich Nicolovius.  
이한구(역). (1992).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울: 서광사.
- Oberleitner, Gerd.(2007). Glob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mbridge: Polity.
- Pogge, Thomas W.(2008).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osmopolitan Responsibilities and Reforms. Cambridge : Polity.
- Starkey(2010).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ducation for Cosmopolitan Citizenship. Human Rights Education : Reflections on Theory and Practice. Fionnuala Waldron & Brian Ruane(ed)(2010). The Liffey Press. pp.15-42.
- Yoko Motani.(2007). "The Emergenc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Japan. E. Doyle Stevick. & Bradley A. U. Levinson.(ed).(2007). Reimagining Civic Education: how Diverse Societies Form Democratic Citize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271-291.
- Young-Dahl Oh.(2001). A Two Traditions Perspective on the Sovereignty-Human Rights Nexus. A Doctori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ales, Aberystwyth.
- Wang Minggang.(2004). "Ethnic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mes A. Banks.(ed)(2004).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Inc. pp355-374.